“5·18 항쟁 토대 위에 세운 문화전당 분리는 안 된다”

ACC에서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운영 추진에 학계·전문가 반발 확산
“문체부 용역 추진은 지역 의견 무시하고 뒤로 빠지려는 소극적 태도”
5·18의 의미 문화적으로 승화해 세계에 알리라는 ‘민평’ 의미 살려야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내년 5월 개관을 앞둔 민주평화교류원(민평·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5·18 정신을 토대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자는 광주의 비전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문체부 주최로 열린 ‘옛 전남 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오월단체은 ACC에서 옛 전남도청을 분리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애초 ACC 설립 취지대로 민평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월단체는 민평을 분리해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월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공휴 5·18 부상자회 총무국장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일환에서 옛 전남도청이 문체부 소속이 됐으나 옛 전남도청은 5·18최후 항쟁지로서 중요하고 종합적인 공간이므로 5·18 민중항쟁과 국가폭력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평을 문화전당에서 분리해 국가가 관리하는 독립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ACC에 민평이 포함된 것은 5·18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승화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지만, 그동안 ACC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관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행안부가 5·18과 국가 폭력 등 관련 국가 사무 일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 5·18 사적지 보존·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5·18이 국가기념일임에도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5·18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해 5·18 기념 사업이 국가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한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단체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을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 운영 특수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토론자들은 모두 문체부소관으로 운영하고 옛 전남도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도청지킴이 어머니’도 행안부 이관 제안에 반대하며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황성효 복원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5·18 의 성격, 현재 살아있는 가치와 정신을 생각하고, 또 K-민주주의 우월정신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확산성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 문체부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전 세계 39 개국에서 35 개 한국 문화원 운영하는 인프라와 경험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5·18을 세계에 알리는데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옛 전남도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위치했고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복원이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복원된 공간이 완결된 공간으로. 끝나서는 곤란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민평의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희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문체부가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뒤로 빠지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없이 과거로 회기하는 태도”리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체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문체부가 뒤로 빠지며 새로운 논쟁과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본인들의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해야한다. 그 반성에 기초해서 반듯하게 약속을 지키며 운영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명칭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과거 민평으로 운영되던 당시보다 조직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복원을 해봤자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진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 단장은 “공론화 시키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광주와 전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안을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설치 추진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광산을)·장경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개헌은 국정 안정 이후…시급한 현안은 추경”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에서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